

III. 재정경제부

1. 안정적인 성장 기초 유지

내수가 위축되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비축, 수급안정사업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과열지역은 「투기지역」(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등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한다.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기관 건전성 등 경제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개인워크아웃제도를 통하여 신용불량자의 경제회생도를 지원한다.

2. 투자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토지공급을 확대하되 「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가 용도구역 개편('03~ '05)시 개발가능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개발허용 지역)으로 분

류하도록 유도하고,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전용허가권을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한계농지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조정 등 환경규제를 합리화하여 최첨단의 환경기술 적용기업 등에 대해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대화와 타협, 적극적인 증세를 통하여 노사갈등을 최소화한다.

IT 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노력을 지속하고, 서비스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4세대 이동통신 등 IT, BT 등의 핵심기술 개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차별적인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경제자유구역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부산신항·광양만 확충 등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시설투자·수출 등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산업연수생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한다.

3. 더불어 사는 사회의 건설

보육시설 확충, 고령자 기준고용율(3%) 조정,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고령자·청년의 취업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광·산업·연구 등 기능별로 집적화한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중 제정 추진한다.

복지제도의 내실화 등 중산·서민생활 지원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등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금년중 국민임대주택 8만호를 포함한 총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4. 시장기능 중심의 경제시스템 정착

도산3법 통합 등을 통하여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채권단 주도로 현안 부실기업처리를 마무리한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은 보장하되, 책임·투명경영을 위한 시장감시기능은 강화한다.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

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국회계류중)한다.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카슈랑스의 도입, 자산운용산업의 육성 등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5. 변화하는 대외여건에의 능동적 대응

DDA협상, FTA 체결 등 대외개방협상에 적극 대응한다.

DDA협상은 민관합동포럼을 활성화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하에 추진하고, FTA 확대를 위해 추진방식, 대상국가, 속도·시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한다.

남북 당국간 경제협력기구 가동을 정례화하고 철도·도로망 연계 등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상의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03년 우리경제는 「성장의 내용」이 충실해지면서 5%대의 성장을 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3%대, 실업률은 작년과 비슷한 3%내외에서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것이나, 투자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서비스 수지 적자 등으로 흑자폭은 축소한다.

또한, 기업하기 편한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우리경제의 장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